

칼럼



김 윤 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행과 거듭나기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의 성 추행 사건이 밝혀지자 정치권과 국민들은 큰 충격과 실망에 휩싸였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 소동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성 추행 사실을 밝혔다.

1월 15일 김 대표의 성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었다. 당 대표에 의한 같은 당 국회의원 성 추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배 부대표의 발표에 의하면, 김 대표가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 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사건을

알렸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도 사퇴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김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당기위 제소 및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가해자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또한 훼손당한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공포와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 가해자가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대표 성 추행 사건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정의당의 모습에 비춰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충격은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에서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중성이 두 얼굴의 야누스가 떠오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약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운도, 불행도 혼자서 오지 않고 쌍둥이처럼 나란히 온다는 속담도 있다. 앞선 데 달친다는 격으로 정의당은 곤혹과 위기의 연속이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홍을 겪은 것에 이어 당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류호정 의원의 '비서 부당해고' 의혹이 지난달 29일 불거졌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류 의원은 논란에 대해 "국회 보좌진은 근로

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최대한 조용하게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판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은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대표가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젠더·성평등 등 이슈에서 목소리를 높여 온 정의당, 그 정의당의 당대표가 성추행을 했으니, 정의당은 부끄럽고 참담할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선거도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4월 3일 치루어진다.

나는 가끔 말하지만, '인간은 성적 동물(Sexual Animal)'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2대 욕망은 식욕과

성욕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욕이 해결되고나면, 강렬하게 일어나는 성적 충동과 성적 욕망을 제어, 조절, 절제, 인내, 억압, 외면하기가 쉬운 노릇이 아니다. 종교적인 성직자들이 밥을 굶는 단식이나 금식을 상당한 기간을 견딜 수 있으나, 본능적인 성욕을 억누르기가 가장 어렵다고 실토한다.

1년 가까운 코로나 장기화로 설 명절에도 고향에도 못 가는 신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투쟁, 양부모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살인·치사사건으로 모두들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여기에 성추행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성추행 사건이 진행 중인데,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으로 정의당, 너 마저!

사회와 기득권층이 죄다 썩어도 도덕성과 양심을 지켜가는 집단체 사람이 있어야 한 줄기 희망이 있다.

정의당이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보여 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절망과 충격을 딛고 일어나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불변하는 만고(萬古)의 진리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설 선물 택배상자 운송장(運送狀) 처분' 조심하자

명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 탓에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택배가 대중화 되면서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주변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인터넷 쇼핑물 업체와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주문한 택배 운송장이 종이상자에 붙어 있는 상태로 버려진 것을 흔히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버린 택배 운송장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음을 알고 있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듯 택배 상자 겉면에 부착된 화물 운송장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각종 배송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 정보를 이용해 택배 배달원을 사칭해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집

로 전화를 하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빈집털이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일부 택배회사에서도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가상 전화번호를 기재해 실제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번거롭더라도 운송장을 떼어내서 박스를 버리 등 이용자가 범죄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별거 아니라고 방심하는 사이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수 있는 만큼 택배를 받는 즉시 운송장을 떼어 내 바로 폐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배송지 정보를 잘게 절단해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큰 불상사를 막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